

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 비위 의혹 조사 결과

1. 조사 배경

-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산업부로 이첩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이하 '에기평') 직원 관련 비위 의혹 사건 감사 실시

2. 비위 사항 조사 (기간/조사자 : '23. 12. 10. ~ 1. 19.(10일간) / 2명)

◇ (비위사항 - 국조실 조사 내용) 에기평 직원 A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(에기연) 파견근무('22.1~'22.12월) 중 연구비 약 1,200만원을 자문·평가 수당으로 부당 수수하였고, 에기연에 겸직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에기평 소속기관장 승인 없이 직인을 임의 날인하여 파견기관에 제출

※ 자문료 지급 등 연구비 부당 집행 건은 에기연 소관 부처인 과기부에서 별도 조사

① 겸직허가 절차 위반

- 에기연 파견중이던 에기평 직원A가 겸직동의서에 에기평 원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은 아니나, 에기평 인재경영실은 겸직동의서 발급시 「외부겸직관리기준」에 따른 겸직허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'겸직동의서'를 발급하여 절차를 위반

② 파견직원 출장비 지급 절차 미준수

- 에기평은 직원A의 에기연 파견시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출장비 지급에 대해 「여비지급규칙」에 따라 에기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에도, 협의 없이 약 10개월간 에기평에서 출장비(2,416천원)를 우선 지급

3. 조치 내용

- (겸직허가 절차 위반) 에기평 직원의 에기연 겸직연구원 위촉 동의 과정에서,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'기관경고' 조치
- (출장비 지급 절차 미준수) 기관간 별도 협의없이 파견자 출장비를 우선 지급하였는 바, 기관간 사전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'기관주의' 조치